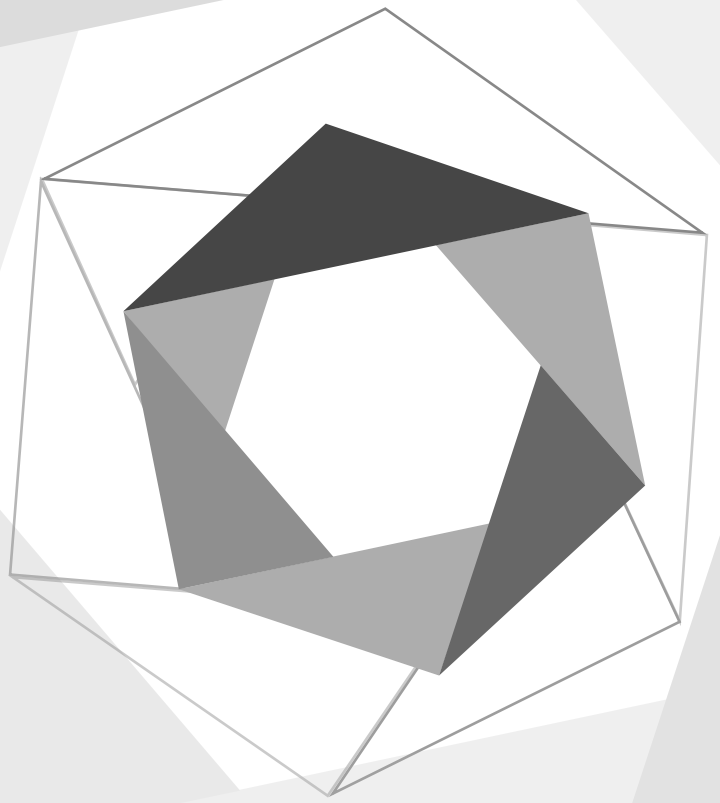


주최·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일시/ 2016. 7. 20(수) 14:00~17:00

장소/ aT센터 4층 창조룸II



[토론회 자료집]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일 시 : 2016년 7월 20일 (수)
장 소 : aT센터 4층 창조룸II

주최·주관 : (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2016.7.20.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계획

1. 제안 배경

- 농식품부는 5월 20일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2017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농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 완료 이후 중앙회·경제지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배구조 규정을 마련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촉진과 조합원 정예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런데 농식품부의 농협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농촌 현장의 현실 및 제반 여건과 맞지 않거나 ▲농업계 내 첨예한 대립·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구조 개편 완료 이후 한국 농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 또한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 연합회는 이번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분석·평가를 통해 올바른 농협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토론회를 기획·추진하게 된 것임

2. 토론회의 목적·목표

- 농식품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분석 및 한농연의 입장 정리·발표
 -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핵심 쟁점사항의 검토·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농연의 입장을 정립·발표
- 사업구조 개편 완료 이후 중장기 차원의 한국 농협의 개편·발전 방향에 대한 원론적 방향 제시
 -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 운영 민주화를 위한 방안 등

3. 토론회 개요

○ 행사 개요

- 제목 :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일시 : 2016년 7월 20일(수) 14:00~17:00
- 장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4층 창조룸II
- 주최·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후원 : 한국농어민신문
- 참가 인원 : 농업인 및 관계자 50여명 내외
- 주요 토론 내용 :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분석·평가, 한농연의 입장 발표, 이를 토대로 농협법의 합리적인 개정 방안을 모색

○ 주제발표자

- 주제발표 1 :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주제발표 2 : 농협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원장)
- 주제발표 3 :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 관련 한농연의 요구사항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 패널(좌장, 지정토론자) 구성

- 좌장 : 정문기 한국농어민신문 편집국장
- 농업인단체 :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
- 농협중앙회 1 (농업경제) : 함용문 부장
- 농협중앙회 2 (축산경제) : 남인식 상무
- 조합장 : 이형권 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회장(화순농협 조합장)
- 학계 : 황의식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문 1.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조 재 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2016.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농협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미흡하다는 문제 지속 제기
- 이에 따라 정부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업구조개편과 운영구조개선 등 농협 개혁을 지속 추진중
- (사업구조개편) 정부·국회·농업인단체 등이 함께 20여년의 논의를 거쳐 '11.3월 농협법 개정으로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 전환
 - 중앙회는 조합 및 농업인 교육·지도 등에 전념토록 하고, 경제·금융사업은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전문경영체제로 확정
 - 중앙회의 금융사업은 설립과 동시에 모두 금융지주로 이관('12.3월) 되었으나, 경제사업은 '17.2월까지 단계적으로 지주로 이관토록 규정
 - * '12.3월 기존 중앙회 경제자회사의 경제지주 편입, '15.2월 판매·유통사업의 경제지주 이관
- (운영구조개선) 중앙회장·조합장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이사회 중심으로 강화하고, 농업인 권익 대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토록 중앙회장·조합장의 '경영 감독' 역할의 책임성 강화
 - * 중앙회 사업대표이사 도입('00), 중앙회장 간선·단임제('09), 비상임조합장 의무도입('09) 등
- '17.2월까지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나, 이에 적합한 법 규정 및 운영시스템이 미흡하여 체제정비를 위한 농협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 아울러, '15.3월 조합장 동시선거의 무자격조합원 문제, 생산자협동조합 정체성, 운영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이 언론·학계를 통해 지속 제기
-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후 중앙회·지주 역할 재정립, 일선조합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6.5.20)하고 의견수렴 중

<기 본 방 향>

- ① 중앙회는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을 보완
- ② 경제지주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조합 경제사업 조성·협력, 중앙회·조합과의 연결장치 마련
- ③ 일선조합은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업과 조직이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 개선
- ④ 농협중앙회·조합의 경영 투명성 확보

1. 중앙회 역할을 “회원조합 육성(지도지원감독 포함)” 중심으로 개편

□ 중앙회는 조합 지도·지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회 이사회에 일선조합 발전* 및 농협 교육계획 수립·운영 의결기능 신설

* 예시)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도, 조합 임원의 자격기준·교육, 무자격 조합원 관리 등 포함

□ 경제사업 이관 이후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경제·금융 등의 사업 연관기능은 각 지주에서 담당)

* 중앙회 경제사업의 경제지주로 이관이 완료됨에 따른 법령 정비

□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 업무규정을 삭제(각 사업전담대표 고유업무로 변경, 조합감사는 조감위원장 직무 범위)

- 위임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비상임인 중앙회장이 사실상 업무 권한을 행사하는 등 책임·권한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 반영

- 중앙회장은 조합원의 대표로서 대외활동에 전념토록 개선

□ 중앙회장은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선출방식을 이사회에서 조합장 이사 중 선출하도록 개편

* 이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 집중 방지, 대외업무 및 이사회·대의원회 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집중 유도

2. 시장대응에 적합한 경제지주 운영구조 정립

□ 경제지주 설립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하고, 중앙회·지주의 사업 범위와 수행 역할 등을 재정립*하여 경제지주의 원활한 사업수행 유도

* 기존 중앙회가 수행하던 조합과의 공동이익 증진, 회원의 경제사업 위촉 금지, 농축산물 판매활성화 등을 경제지주가 수행토록 함

- 자회사를 통해 시장대응사업을 수행하고, 본체사업으로 일선조합 경제사업 역량 강화 및 자회사 감독·관리를 병행
- 조합(원)의 조합지원자금 축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 조성·회계는 중앙회 존치, 경제사업 관련 자금 운영계획 수립·시행은 지주에게 부여

□ 경제지주가 협동조합기업으로서 조합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중앙회와 겸임(전체이사의 1/2이내)하는 조합장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함

* 경제사업 기준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유도(지주정관)

□ 경제지주와 회원조합간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경제지주에는 회원과의 협력·회원 사업 위촉 금지 의무 및 농축산물 판매활성화 계획 수립·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일선조합에게는 계통거래 우선 의무를 부여

□ 임원·조직 등 기타 관련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성 부여

- 법으로 정하고 있는 중앙회 임원 선임 규정(인사추천위원회, 축경대표 선임특례) 및 조직규정(농·축경대표)은 법으로서 경제지주에 강제하지 않고 농협 자율로 위임

* 경제사업 이관 완료 후 현행 축경특례(축경대표 선출방식 특례)는 중앙회에서 적용대상이 없어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삭제

3. 경제사업 이용자 중심의 일선조합 운영시스템 구축

□ 조합 사업이용자 중심의 조합원 정예화

- 조합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이자 기본 의무인 경제사업(구매·판매)을 이용토록 하여 조합 경영의 건전성 유도
 - * ('14)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은 450천명(총 조합원의 19.1%), 경제사업 중 판매사업(조합으로의 농축산물 출하 등) 미이용 조합원은 1,725천명(73.4%)
 - ** '15.3월 동시조합장선거 결과,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인한 논란으로 조합 및 조합원 피해 발생 우려 등 학계·언론 지적사항 반영
-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농을 유지할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탈퇴를 유예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 마련
 - * 불가피한 사유(예시) : 가축 전염병·토지의 수용 등
- 조합의 임원은 적어도 조합의 판매사업의 이용 실적을 갖추도록 하여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 운영이 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운영 유도

- 일선조합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이행 규모를 각각 정하고 중앙회가 이를 관리토록 하여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유도
- 조합이 조합으로의 판매 원칙을 잘 준수하는 약정조합원*을 적극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 농산물 출하 등 조합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을 말하며, 약정조합원에 대해 조합은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음
 - * 현재 약정조합원 제도를 운영하는 조합은 3개에 불과
-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 재가입 기한(1년6개월)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

4. 농협 지도·감독 및 경영투명성 강화

□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감사위원 중 선출토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독립성 확보

* 현행 농협법 제129조 : 중앙회 감사위원 5인 중 3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전문가,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선출

- 농협중앙회·계열사 등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장이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가 수행하는 등 견제기능 불투명하다는 외부 지적 반영

□ 일정규모 이상(대통령령으로 위임)인 조합은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 감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조합내부 통제 강화 및 조합 사고예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규모는 법 개정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 비상임 조합장임에도 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개입 등 사실상 상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사업집행권(교육지원·경제사업)을 허용한 예외조항* 삭제

* '09.6월 비상임 조합장 의무도입에 따라 제도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부여

□ 중앙회는 경제·금융지주 및 자회사(손자회사 제외) 감독,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협동조합 원칙에 맞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감독토록 하며 조합과의 연계가 큰 지주회사는 정부의 지도·감독 근거 유지

3 | 향후 계획

□ 입법예고기간(5.20~6.29, 40일) 중 제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후 정부안 확정

□ 규제·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8~9월), 정부안 국회 제출(9월)

I 추진현황

1. 농협법 개정 배경 및 주요 경과

◆ 농협이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농협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미흡하다는 문제 지속 제기

- 이에 따라 정부는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고,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 시키기 위해 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운영구조개선을 지속 추진

□ (사업구조개편) 20여년간의 논의 끝에 '11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1중앙회·2지주회사(경제·금융) 체제로 전환('12.3)

- 향후 중앙회는 조합 및 농업인 교육·지도 등에 전념토록 하고 경제·금융사업은 시장경쟁이 가능하도록 전문경영체제로 확정
- '12년 경제·금융 지주회사 설립 당시, 중앙회의 금융사업은 설립과 동시에 모두 금융지주로 이관되었으나, 경제사업 이관은 '17.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여 현재는 사업구조개편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

* '12.3월 기존 중앙회의 경제자회사를 경제지주에 편입

** '15.2월 중앙회의 유통·식품 등 대부분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 완료

□ (운영구조개선) 중앙회장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를 이사회 중심으로 강화하고, 농업인 권익 대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토록 중앙회장·조합장의 '경영 감독' 역할의 책임성을 강화

* 사업부문별 대표이사('00), 중앙회장 간선·단임제 등('09)

** 조합장 비상임화,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09)

《 농협개혁 주요 경과 》

- [1994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앙회 신용·경제 부문별로 독립사업부제 도입
- [1999년]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분리 추진 부칙 신설
- [2000년] 협동조합개혁위원회(1998)의 논의를 거쳐 농축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하여 농협중앙회 설립(통합농협중앙회 출범)
- [2003년] 농협개혁위원회(농협) 설치
- [2004년] 농협중앙회장 비상임화, 사업은 전문경영인 책임경영
- [2007년] 농협경제사업활성화와 신경분리방안 마련(3월)
- [2009년] 중앙회장 간선·단임제 도입, 조합장 비상임화 등 1단계 운영구조 개선 완료
- [2011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안 확정(농협법 개정안 통과)
- [2012년] 농협중앙회 경제·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금융지주 설립

2. 추진 여건 및 문제점

<중앙회 등>

- '17.2월까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나, 이에 적합한 법 규정 및 운영 시스템 미흡

⇒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대비, 시장 대응에 적합한 경제지주 운영구조 정립 필요

- ※ 이사회 구성은 조합에 의한 통제 등 협동조합 원칙을 고려하되, 경제지주 조직 구조, 대표 선임 방식 등은 시장경쟁력 강화가 중요
- ※ 중앙회(상호금융), 경제·금융지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합 지원자금 운용 방향도 설정할 필요

- 그동안 이사회 중심의 전문 경영체계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중앙회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 소재의 불명확 문제 지속

- 중앙회장은 비상임이지만 경영 관련 권한을 일부 보유하여 경영과 감독 분리가 불분명하고, 이사회는 전문경영인 평가 등의 역할 미흡

⇒ 감독은 이사회,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 선출방식, 이사회 기능·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농협중앙회·자회사 임직원의 사업 운영 과정의 비리, 임원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

- 중앙회·자회사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부각, 자회사의 부당한 업무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요구(국회 등)

⇒ 정부, 중앙회 및 자회사, 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위해 지도·감독 시스템 정비 필요

<일선조합>

-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이 많아 생산자단체로서 농협 정체성 위기 및 판매농협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

* 현재 농업인 자격요건만 갖추면 경제사업 이용이 없는 조합원도 자격 유지

-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전제로 하는 약정조합원 제도 운용 조합은 3곳에 불과하여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 확대 한계

⇒ 조합원 경제사업 이용의무, 임원 요건 강화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기반 조성 필요

- 대부분의 조합은 신용사업보다 경제사업 비중이 낮고, 주 사업으로 경제사업 의무 규정도 없어 시장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지역농협 신용사업 비중: 농촌형 35.0%, 중소도시형 64.3%, 대도시형 82.7%

** 신용사업 경쟁 추세를 감안할 때, 신용사업 수익 범위 내에서 경제사업의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 유지 곤란 예상

- 또한, 가입 후 1년6개월간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제한하여 조합 간 경쟁을 통한 사업 활성화 제약

* 구역현황('14) : 확대(읍·면 → 군 또는 시) 344개 (39.5%), 유지 526개 (60.5%)

⇒ 주 사업인 경제사업 비중 의무화, 조합간 경쟁시스템 강화를 통해 시장 대응능력 제고 필요

- 임원의 권한과 책임 괴리, 내부 비리로 조합 부실 초래

*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장, 교육지원사업·경제사업 등 집행권 보유

* 경제사업분야의 사업 손실 증가(가격하락), 거래처와 부적절한 거래 등을 통한 부당 자금지급 등

⇒ 조합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감사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 확보 필요

비 전	시장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목 표	판매농협 구현, 지속 가능한 경영체 육성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실현 ② 경제사업 경쟁력 제고 ③ 경영 투명성 확보
추진 과제	<p style="text-align: center;">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 및 정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구조 정립 ② 중앙회·지주와 조합 연계 강화 ③ 중앙회·지주 임원 선임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p style="text-align: center;">일선조합 발전 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실현 ② 조합 경제사업 경쟁력 제고 ③ 조합 사업운영의 투명성·독립성 확보
	<p style="text-align: center;">농협 지도·감독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회, 지주, 자회사 관리체계 구축 ② 감사 시스템 투명화

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완료 및 정착

□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에 적합한 중앙회 구조 정립

가. 중앙회장 직위(업무범위)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비상임으로 선출된 중앙회장이 경영 관련 권한 일부를 보유하면서 사업대표에게 위임·전결*의 형태로 업무 집행

* 감사위원장(회원 감사), 경제대표(회원 권익증진 연관 사업중 경제사업 관련 계획 수립)

- 위임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비상임인 중앙회장이 사실상 업무 권한을 행사하는 등 책임·권한 소재 불명확 문제

- (개편방향) 회장은 조합원의 대표로서 대외활동에 전념토록 개선

- 조합감사는 조감위원장 직무 범위에 규정, 경제사업 관련 사업 집행권한은 삭제(지주 이관)하여 비상임 취지대로 역할 명확화

나. 중앙회 이사회 기능·구성 등 개편

- (현황) 중앙회 이사회는 회장·사업부문 대표이사를 포함한 30인 이내, 범 농협 사업계획 수립·자산 매각 등을 의결하는 기능 수행

-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 이관을 고려하여 현행 이사회 기능·구성 등의 개편 필요

- (문제점) 현행 중앙회 이사회의 기능은 조합육성을 위한 계획보다는 조합 자금지원 및 중앙회 자체 사업경영에 중심

- 사업구조개편 이후 사업과 관련된 기능이 없어지나 이사회 인원·구성은 고정되어 비효율 우려

- 이사회가 대표이사 해임 건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임기가 고정되어 이사회 기능이 제약된다는 인식 존재

* 임기(농협법) : 회장, 조합장 이사 4년, 사업전담대표이사 2년

□ (개편방향) 사업 연관 기능은 축소(지주 이사회 담당)하고 조합 및 자회사(지주) 관리, 이사회 경영진 평가 강화 유도

- 중앙회 이사회 의결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 이사회 의결에 일선조합 발전* 및 농협 교육 계획 수립·운영 포함

*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도, 조합 임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교육, 무자격 조합원의 관리 등 포함

- 중앙회 이사회 구성*은 유지하되, 일부를 경제지주 이사와 겸임시켜 범농협 운영 효율성 제고

* 이사회 축소가 타당하나, 조합 관련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유지(필요시 '18년중 조정 검토)

- 대표이사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 초과 불가(상법 인용)'로 하여 경영의 안정성과 경영성과 등에 따른 탄력적인 임용·해임 유도

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

□ (현황 및 문제점) 그동안 추진해 온 농협개혁 흐름*에 따라 회장 중심이 아닌 이사회 중심의 운영구조를 유도하고 있으나,

* 과거 조합장 직선선출의 선거로 비리·정치적 의사결정 및 경영개입 등의 폐단 방지

- 비상임 회장은 경영·인사 등 집행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선출직 회장은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

* 비상임 취지와 선출직(선출 → 구성원 민의 반영 → 역할 강화 및 경영 개입)의 갈등

** 국회 등 대내외적으로 회장의 사실상 업무권한 행사에 대한 비판이 있는 상황

- 해외 선진협동조합은 경영 통제권 집중 방지를 위해 공동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조합원 대표(의장)는 이사회에서 선출

- (개편방향) 이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 집중 방지를 위해 이사회 선출제로 변경, 대외업무 및 이사회·대의원회 의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집중
 - 기존 농협개혁 흐름과 비상임 중앙회장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이사 조합장 중 회장을 선임토록 이사회 선출제 도입

□ 사업구조개편 이후의 경제지주 구조 정립

가. 경제지주 역할 정립

- (현황) 농협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설립('12.3) 및 중앙회 판매·유통 사업을 지주로 이관*('15.2)
 - * 경제사업 이관('15.2): (지주본체) 청과·도매, 공판, 식품, 안심축산 등, (자회사) 양곡, 마트
 - 중앙회 농·축경대표가 경제지주회사 공동대표직 수행
- (문제점) '17.2월 중앙회의 자재·회원경제지원 등 나머지 사업 이관 이후의 경제지주 조직구조 및 역할정립 검토 필요
 - 경제지주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조합과 경제지주·자회사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
- (개편방향) 경제지주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중앙회·지주의 사업 범위와 수행 역할 등을 재정립
 - (중앙회) 일선조합 발전, 상호금융 발전, 경제·금융지주 감독
 - (경제지주) 자회사를 통해 시장대응사업을 수행하고, 본체사업으로 일선조합 경제사업 역량 강화 및 자회사 감독·관리를 병행

- * 경제지주는 금융지주와 달리 사업지주로서 조합 경제사업 관련 자금 등 운용
- * 자회사는 사업 수행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장 대응능력 강화
- 협동조합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조합과 계통사업 등의 연계강화를 위해 경제지주의 조합장 이사는 중앙회 조합장 이사와 겸임*토록 규정
- * 경제지주 이사회가 중앙회 조합장이사 중 경제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지주 이사로 선임
- (금융지주) 농협 수익센터, 농업분야 자금 순환처 역할

나. 경제지주의 축산경제부문 특례 관련 사항

□ (현황) '00년 농축협 통합 시 축산경제 특례조항* 신설

- * 농협법 제132조: ①축경대표는 축산조합장협의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 (선출 특례), ②축산부문 재산·직원·사업계획의 자율성·전문성 보장(사업특례)
-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인추위를 도입하면서 축경대표 선출특례를 폐지하는 개혁과제를 도출*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례 유지('09)
- * 모든 대표이사를 인추위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 선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09.1.16.)
-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현행 축경특례는 적용대상이 없어져 효력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축경특례 현행 유지의 요구 존재
- *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17.2월 중앙회의 농·축경사업이 지주로 완전 이관되어 중앙회 농·축경대표의 역할 종료
- 특히, 농협경제지주회사는 향후 경제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야할 필요

□ (문제점) 그동안 축경대표는 중앙회 축산경제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경영인과 감독인(대표자)의 기능이 혼재

- 경제지주에서는 ‘대표자’가 아닌 전문성을 보유한 ‘경영자’가 필요하고, 경영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계 바람직
- 특히, 향후 경제지주에서 농·축산업이 보다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축경부문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

□ (개편방향) 효력이 상실되는 중앙회에 대한 축경특례(축경대표 선출 방식)는 삭제, 경제지주 조직·인사는 법 규정이 아닌 정관으로 위임

- 경제지주 임원의 선임 방법,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농협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제지주의 인사·조직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고 시장경쟁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농협법보다 자체적으로 정함이 바람직

□ 중앙회 · 경제지주의 일선조합 연계 강화

가. 경제지주·조합간 경제사업 상생 방향

□ (현황 및 문제점) 지주 이관 후 농축산물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과 경제지주·자회사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 (조합 의견) 경제지주의 사업으로 조합 경제사업이 위축될 우려
- (중앙회·지주) 일부 조합들의 이해 미비로 다수 조합과 공동 사업* 추진 애로, 계통거래율이 낮아 시너지 효과 창출 미흡

* 조합 가공공장(김치 등) 통합, 사료공장 통합, 인삼 브랜드 통합 등

□ (개편방향) 중앙회·경제지주·일선조합별 역할 및 의무 부여

- 경제지주는 계열화를 통해 사업 물량을 최대화하여 다수의 조합이 이용토록 하고 시장 대응력 강화 측면을 강조할 필요

- 다만, 현재 일부 조합과의 판로 경쟁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지주 협력(위탁) 조합 위주의 공동사업, 중장기적으로 조합·지주 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이에 따라 농협법 개정을 통해 지주에는 조합과의 공동이익 증진·농산물 판매활성화 계획 수립·운영의 의무를 부여하고, 일선조합에게는 경제지주 등 계통거래 우선 의무를 부여

나. 조합 경제사업 지원 자금 운영 효율화

- (현황) 조합지원자금 재원(회계)은 조합 상호지원자금,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무이자 자금으로서 중앙회 농경·축경에서 운영중
- (문제점) 중앙회의 자금이 조합 통치 수단이라는 의혹, 조합 경제사업 육성 보다는 배분식의 자금 운용으로 비효율 지속 지적
 - 경제사업 이관 후 지주에서 자금을 보유하여 경제사업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나, 자금 이관 시 세금 등 세무적 문제, 조합 지원 축소를 우려한 중앙회·조합의 반대문제 직면
- (개편방향) 조합지원자금의 조성·회계는 중앙회 존치, 경제사업 관련 자금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권한은 지주에게 부여
 - 경제지주가 경제사업 관련 자금 운영을 담당하여 자금의 배분적 활용을 지양하고 조합 경제사업 육성 등 효율성 확보
 - * 운용 주체를 경제지주로 명시(농협법),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시 자금 운용 현황 등 확인
 - 조합(원)의 조합지원자금 축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 조성은 중앙회에 존치하되, 경제지주에서 운영토록 보완
 - 정책자금 역시 경제사업 지원과 분리 지원이 어려운 점, 중앙회의 경제사업 인력 부재 등을 감안하여 경제지주가 운영

1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 정예조합원 육성

가.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 강화

- (현황)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성격을 가지며, 1년 이상 사업 미이용시 제명 사유에 해당

*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은 생산 농산물의 조합 출하 등 사업을 성실히 이용할 의무

- 조합사업 중 경제(구매·판매)사업 또는 신용(예금, 대출, 보험)사업 중 어느 하나만 이용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유지

- (문제점)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 무자격 조합원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공익권(선거권, 의결권 등) 행사로 의사결정 왜곡

* 조합원이 1년 동안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고도 1천원만 조합에 예금해도 조합원 자격 유지 가능

- '15.3월 동시조합장선거 결과,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인한 논란으로, 조합 및 조합원 피해 발생 우려

* 20개 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소송 제기

- 조합원 확인도 농업인 자격요건만 확인하고 있어 판매농협 실현과의 연계성 미흡

* ('14)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은 450천명(총 조합원의 19.1%), 경제사업 중 판매사업(조합으로의 농축산물 출하 등) 미이용 조합원은 1,725천명(73.4%)

□ (개편방향) 조합원 제명요건에 경제사업 이용을 포함

- 조합원이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토록 근거 마련

* 단, 불가피하게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제명 규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는 정관으로 예시

- (예시안) 복수조합원(세대원), 주소(거소)와 사업장이 원격지에 위치, 조합원이 재배·사육하는 품목·업종을 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나. 약정조합원 활성화

□ (현황) 조합과 조합원이 경제사업 이용계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용할 경우 사업이용이나 배당 등 우대('10.12.10. 시행)

*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등 세부사항은 정관에 규정

□ (문제점) 약정조합원 제도 운용조합은 3개*(0.3%)로 매우 미흡, 대다수 조합은 기존의 조합-조합원 간 개별계약 형태로 운영

- 약정조합원 세부규정 미흡으로 조합원 정예화에 한계

* 운용조합 : 부천농협(장려금), 동군산농협(배당), 안동농협(장려금·배당)

** 구매사업 외상거래 약정, 벼 계약재배 약정, 공동계산 약정 등

□ (개편방향) 조합이 약정조합원 제도를 적극 도입·확대하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평가 & 인센티브'를 병행한 관리체계 구축

- (조합) 정관에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개선하고, 세부규정 마련 및 교육 강화

- (중앙회) 종합업적 및 경영평가 등에서 조합의 약정조합원제도 운용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우수조합은 포상, 자금지원 등을 우대

□ 임원의 판매사업 이용 요건 강화

- (현황) 임원의 조합사업 참여와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 사업이용실적을 임원 결격사유로 적용

* 조합 임원 자격 기준(경제사업량) : 조합 평균 이용금액 40% 이상(특·광역시 20%)

- (문제점) 전체 경제사업 이용실적에 반영하므로 판매사업*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어 의사결정 왜곡 우려

* 판매사업 :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조합으로 출하(판매)

* A농협의 경우, 임원 자격 기준을 충족한 조합원 중 판매사업 미이용 비중이 80% 이상 차지

구 분	조합원 수	임원 자격 보유자(조합 경제사업 평균의 40%)	
			판매사업 미이용자
A농협	769명	184(24%)	162(88%)
B농협	1,584명	177(11%)	74(42%)

- (개편방향) 조합의 판매사업 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임원 결격사유에 반영

* 조합원이 조공법인에 출하한 실적도 조합 판매사업 실적으로 포함

* 다만,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결격사유 중 출자좌수 (1좌 = 5천원)는 현행보다 완화 추진(정관례 개정)

2 | 경제사업 경쟁력 제고

□ 조합선택권제도 활성화

- (현황) 조합원이 농산물 판매사업 등을 가장 잘하는 지역농협을 선택하여 가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합선택권' 도입('09)

- 다만, 철새 조합원 및 조합장선거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도록 1년 6개월 제한

- (문제점) 지역농협의 구역을 확대한 조합이 적고 일정기간 제한 요건으로 “조합선택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

- * 구역현황('14) : 확대(읍·면 → 군 또는 시) 344개 (39.5%), 유지 526개 (60.5%)

- ** '10.12.10일 이후 탈퇴하여 동일구역의 다른 조합에 재가입한 현황 : 3,848명(0.19%)

- (개편방향) 조합원의 가입·탈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협동조합원칙에 맞게 조합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

□ **설립인가 취소기준 추가 및 건전경영 체계 구축**

- (현황) 농협법(제167조)에서 조합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명령 규정

- * 주요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 (문제점) 대다수 조합이 신용사업에 치우쳐 농업인단체 등 각계로부터 생산자·농산물 중심의 조합 경영 및 정체성 의혹 지적

- 현행 취소기준은 단순한 사전자격 또는 사후관리 측면만 강조되고 있어, 조합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경영에 대한 지도·감독 지난

- 조합은 농업인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매개로 모든 사업을 균형 있게 경영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하여도 무방한 실정

- 전체 사업 중 경제사업 비중이 매출액 기준 30% 이하 조합이 78개에 달하고 있어 조합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 경제사업 비중 30% 이하 : 지역농협 72개, 지역축협 1개, 품목조합 5개

- (개편방향) 조합 설립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도록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활용하여 경제사업을 일정기준 이상 이행토록 의무화

- 우선, 조합의 경제사업 이행 기준을 신설(정관위임)하고 중앙회를 통해 관리·감독(미충족 시 합병권고, 자금지원 제한 등) 근거 마련
 - 다만, 경제사업 종류와 계량화 지표*는 현행 규정과 일선조합 사업 분석을 통해 실행가능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 농협법 제57조제1항제2호(경제사업), 사업량 or 매출액(영업수익) or 매출총이익
 - * 예시) 총사업량(교육·지원 + 경제 + 신용) 중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하여 조합의 정체성 강화
 - * 다른 법 사례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 경제사업 이행기준과 관련한 중앙회의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은 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
 - * 조합의 건전 경영 유지도 중요하지만 조합 본연의 사업인 경제사업 소홀 조합은 지도·감독 강화
- 도시조합은 농촌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사업 이용이 적을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감안하면서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사업 분야 발굴
 - *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비중 확대 부담 완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형 조합 및 조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해당조합의 경제사업량으로 인정

3 운영 투명성 확보

□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범위 명확화

□ (현황) 조합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책임경영체계 마련 및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비상임조합장 제도 도입('09)

○ 자산 2,500억원 이상 지역조합은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을 두되, 업무 일부(교육지원·경제사업)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

* 법 제46조(임원의 직무) :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 상임이사가 업무 집행. 다만, 제45조③에 따른 비상임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경제사업 전부 또는 일부 집행 가능

< 참고 자료 : 상임·비상임 조합장 업무 권한 >

조합 자산총액	조합장 근무형태	조합장 업무	비 고
2,500억원 <u>이상</u> (335개)	비상임 (334명*)	신용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 일부 ※ 교육지원, 경제사업 중 수행	비상임 의무도입 (상임이사가 신용사업 등 수행)
2,500억원 <u>미만</u> (797개)	상임 (775명)	모든 사업 (일부 상임이사에 위임)	비상임 자율도입 (정관에 따라 상임·비상임 결정)
	비상임 (23명)	실질적 사업 권한 없음 ※ 상임이사가 모든 사업 관장	

* 비상임조합장 의무도입 조합 중 1개소는 비상임조합장 제도 도입 절차(정관개정) 진행중

* 자산 1,500억원 이상 조합은 상임이사 의무도입

□ (문제점) 비상임이지만 교육지원·경제사업에 대한 업무집행을 통해 조합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 상임업무 수행

□ (개편방향) 비상임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합 경영과 관련된 일반적 직무(교육지원·경제사업)를 수행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

○ 조합을 대표한 대외활동, 총회·이사회 의장으로서 전문경영인(상임이사) 경영활동 지도·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개선

이 상임감사 의무 도입

- (현황) 조합은 2명의 감사를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선출 가능(농협법 제45조)
 - 전체 1,132개 조합 중 상임감사 도입 조합은 7개소, 대개의 조합은 내부 조합원이 감사로 선출('16.6월 기준)
 - * 조합, 중앙회 또는 품목조합연합회,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공공기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 ** 인추위 추천, 총회(대의원회)에서 투표로 선출(선거인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
- (문제점) 매년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의 사고 발생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실 초래
 - 상임감사 도입이 조합 의무사항이 아니고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 조합장선거 등과 연계될 우려 등으로 유명무실화
 - 또한, 내부출신 조합원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상시감사의 어려움으로 조합 사고예방에 역부족
 - * 사고현황 : ('14) 349건 → ('15.10) 354 <업무규정 위반(72%), 복무규정(14%), 횡령 등
- (개편방향) 상임감사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감사능력 제고
 - 상임감사를 활용토록 유도*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시행령 위임)의 조합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출토록 개선
 - * 상임감사를 둔 조합은 감사주기를 2년 1회에서 3년 1회로 완화(농협법 개정, '14.12)
 - ** 자산규모('14년 기준) : 1조원 이상 45개소, 5천억 이상 153개소, 3천억 이상 226개소

1 중앙회·지주·자회사 관리체계 구축

□ 정부는 조합과의 연계가 큰 중앙회와 경제지주, 금융지주, 농협은행에 대해 지도·감독 근거 유지

* 정부의 감독범위 : (기존) 중앙회, 농협은행 → 중앙회, 경제·금융지주, 농협은행
- 사업구조개편과 동시에 설립된 농협은행은 '11.3월 농협법 개정 시 정부의 감독대상에 포함

○ 특히 경제지주에 대해서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대상이 경제지주로 변경됨에 따라 감독대상에 포함할 필요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농협법 상 근거 마련, 중앙회는 경제·금융지주를 총괄 감독

○ 농협 자회사가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지주의 자회사 감독 근거 마련

○ 지주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및 규제 방지를 위해 중앙회의 손자회사(지주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은 삭제

2 중앙회 감사 시스템 투명성 강화

□ (현황) 최근 언론·검찰 등에서 농협중앙회·조합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내부 비리가 지속 지적, 농협 감사시스템 개선 필요

○ (감사위) 농협중앙회·계열사 등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장이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가 수행하는 등 견제기능 불투명

* (위원장) 위원회에서 위원 중 호선, (위원) 인추위 → 총회 의결

- (조감위) 농식품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역할도 수행하나, 회장 직속으로 운영, 수감 대상인 농협 내부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이 부족

* (위원장) 인추위 → 총회 의결, (위원) 위원장 제청 → 이사회 의결

□ (개편방향)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감독기능 강화

- 감사위·조감위원장(시행령 개정 계획)을 외부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함

* 현행 시행령 상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 중앙회·조합·금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 경력으로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 제외, 학계·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근무경력 등

VI

향후 추진 일정

□ 입법예고기간(5.20~6.29, 40일) 중 제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후 정부안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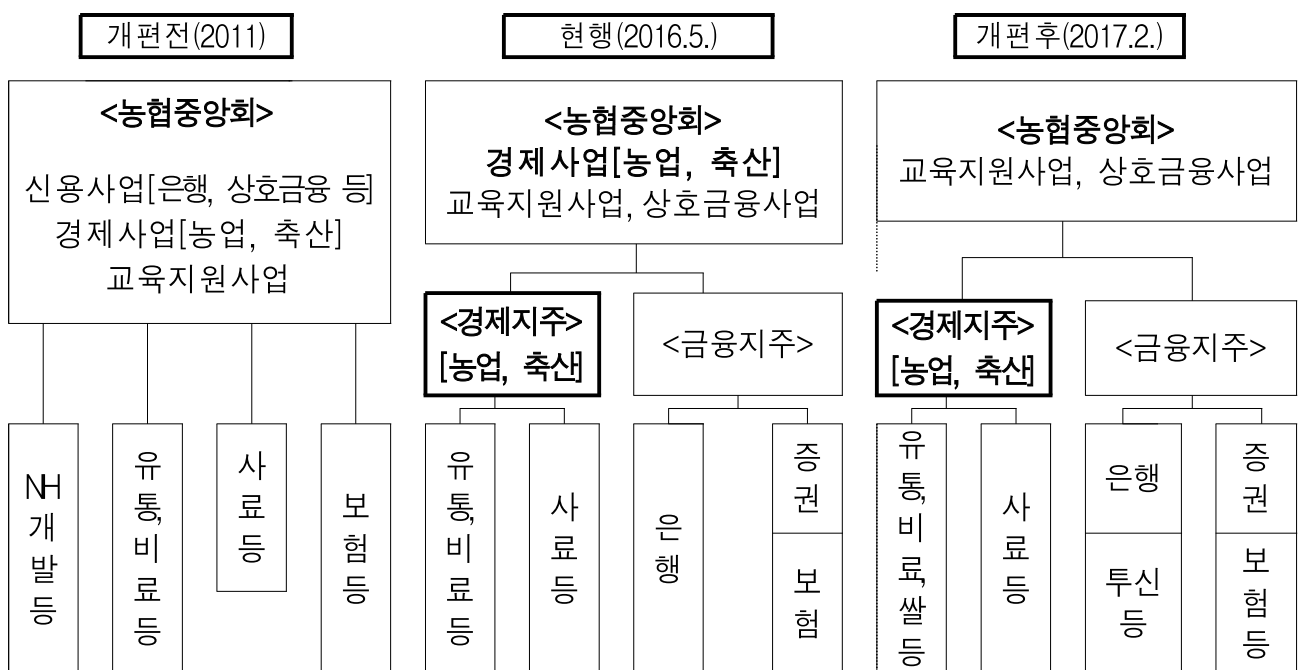
- 규제·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8~9월)
- 정부안 국회 제출(9월)

참고 2

농협 사업구조개편 개괄

-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년의 논의 끝에 '11.3월 농협법을 개정하여 중앙회의 경제·신용사업 분리('1 중앙회 - 2 지주회사) 체제로 결정
 - * '12.3.2일, 중앙회 신용사업은 금융지주로 완전 이관, 경제사업은 '17.2월까지 경제지주로 단계적 이관
 - 농협법 부칙 제6조 : '15.2월까지 판매·유통 사업, '17.2월까지 나머지 경제사업 이관
- 향후 '17.2월까지 중앙회의 잔여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이관 되면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도하는 교육지원과 상호금융사업을 수행
- 경제지주는 기존 중앙회에서 수행하던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자회사 혹은 지주 본체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전문성을 강화

<사업구조개편 전·후 농협 구조>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문 2.

농협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김 기 태 원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협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1. 들어가며

2017년 2월말, 1994년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던 농협중앙회의 사업분리의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찍게 된다. 2011년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농협중앙회의 중앙회-금융지주-경제지주의 세 법인으로 분리한다고 확정했지만, 경제지주 분리에 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여 6년동안 차례대로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과정이 자재사업부문 등을 마지막으로 완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2011년 농협법에서는 자본금 배정, 경제사업 방식, 지주회사의 직제와 중앙회와의 관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경제지주로의 완전이관을 앞두고 다시 한번 농협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은 이런 의미에서 필수적인 법제도 정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농업계에서는 주요 농협법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였다. 농협법 개정안이 과연 농업농촌 현장의 상황과 농협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농협이 현장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농협법은 단순히 농협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농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협소하게 평가하기 보다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농업농촌 전체를 조망하며 평가해야 한다. 또 세부적인 자구를 평가하기 전에 전체 틀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가지고 농협법 개정안을 설명하려 한다. 첫째, 이번 법개정의 가장 직접적인 목표인 경제지주 완전 이관과 경제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농협법 개정인가? 둘째, 그동안 농협의 발전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농협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인가? 셋째, 사회경제적 내외부 환경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업농촌의 미래와 농협의 운영활성화, 농민의 실익 증진을 위한 농협법 개정인가?

2. 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농협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및 해설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일선조합 육성 중심의 중앙회 운영구조 정립
 - 조합발전계획 수립, 운영 역할 추가
 - 경제사업기능은 중앙회 이사회 의결에서 제외(경제지주 이사회 소관)
 - 사업대표의 중앙위 위임 규정 삭제(경제지주회장 고유업무 화)
 - 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대의원 간선에서 조정)
- 시장대응에 적합한 경제지주 운영구조 정립
 - 경제지주 설립 목적의 명시(전문성 강화 -> 농업인/조합이익 기여)
 - 경제지주의 임원선임은 법에서 제외, 정관 자율 위임(축산특례 폐지)
 - 중앙회 조합장 이사와 경제지주 이사의 겸임(1/2이내)
- 경제사업 이용자 중심의 일선조합 운영시스템 구축
 - 조합원 정예화(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45만명)의 제명)
 -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강화(판매사업 이용 의무화)
 - 약정조합원 육성 계획 매년 수립
- 농협 경영투명성 강화
 - 중앙회 감사위원장, 조합감사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선임
 - 일정규모이상 조합은 상임감사 의무화(규모는 대통령령에 차후 명시)
 - 비상임조합장의 사업집행권 예외조항 삭제

농협법 개정안의 4대 핵심 이슈

이번 농협법의 개정내용은 농협이 향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위에서 요약된 내용 하나하나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다음의 4대 핵심 이슈는 농업계와 농협 내부에서 상당히 혁신적이고 논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1. 경제관련 사업의 완전이관에 따른 중앙회 업무 및 권한의 조정
 2.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변경(간선제에서 호선제로)
 3. 축산특례의 폐지(법적 규정에서 정관 자율로)
 4. 일선조합 조합원 정예화 및 임원 판매사업 의무화
-

이들 4대 핵심 이슈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협동조합의 정체성 강화 및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법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농협의 협동조합정체성 논란의 핵심인 대리인 문제의 관점에서 보거나, 혹은 농협의 그동안의 흐름과 주요 구성원들의 수용가능성, 농업계의 역관계를 감안한 법개정의 가능성에 관한 경로의존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핵심 이슈에 연계된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가급적 양자의 입장 중 합리적인 부분만을 정리하고, 이후 논의가 생산적으로 심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겠다.

3. 핵심 이슈를 이해하는 방법

경제사업 완전 이관을 위한 제도 정비

2011년 개정된 농협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말까지 경제사업을 완전 이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2011년 농협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제사업의 방향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외부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2012년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계획에 입각한 투자를 연차적으로 진행하면서, 2012년 지주회사 설립, 2015년 양곡, 소매 등 유통판매 자회사의 설립 및 지주회사 이관의 절차를 밟고 있다. 2017년 자재사업의 이관을 통해 사업부문의 이관이 완료되는 것은 이전부터 합의된 바였다.

하지만 산지유통, 채소수급 등 정책사업과 조합지원자금의 편성권 등을 둘러싸고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농협중앙회 내부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다. 2011년 농협법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회 일부에서는 산지정책사업이나 농가조직화 등은 경제사업이 아닌 교육지도사업이라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 농협법의 취지를 감안하고, 또 2014년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경제지주의 일선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조항을 농협법에 삽입한 것으로 볼 때 이번 2016년 농협법 개정안에서 농협중앙회에 소속된 경제사업 관련

정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는 것은 그동안의 입법 흐름과 일관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에 대한 사업, 정책사업 등이 모두 이관되기 때문에 농경대표이사와 축경대표이사가 중앙회 직제에 남을 이유가 없고, 대표이사의 역할을 경제지주 회장으로 이관하는 것도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경제사업 업무가 경제지주로 이관되기 때문에 다음의 개정 조문과 같이 중앙회 이사회의 기능에서 경제사업과 관련된 항목을 경제지주 이사회로 이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제125조(이사회)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3. 조직·경영(->중앙회의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8. 중요한(-> 중앙회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완전이관에 따른 제도 정비와 관련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그동안 중앙회가 일선조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업무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음에 인용한 제134조 제1항의 후단 신설 및 제7항의 내용이 그것이다.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후단 신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 관련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5호의 사업과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 관련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

⑥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등을 활용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⑦ 중앙회가 회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자금계획에 따른다.

농협중앙회의 조합지원자금은 지난 50여년간 적립되어온 내부유보자금(4.5조원) 및 지주회사의 명칭사용료와 배당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명목으로 회원조합들에게 배분되고 있다. 그동안 속칭 무이자자금이라고 이야기되어온 이 자금은 2011년 당시 분석에 따르면 전체 8조원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7조원 정도가 조합 경제사업 지원을 명목으로 회원조합에게 배정되고 있다.

이런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후 조합원 교육, 조합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고, 경제관련 지원사업은 경제지주에서 예산 및 지원계획을 마련하면, 중앙회의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것으로 역할이 한

정되어 조합지원자금에 대한 중앙회의 역할은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까지 마련된 사업구조개편 계획에 따르면 경제지주는 6조원의 자본금을 배정받아 경제사업 전반의 활동을 수행한다. 경제지주의 자본금은 경제지주 본체사업과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설비에 대한 투자와 운전자금, 일선조합에 대한 공동출자, 자금대여로 활용된다. 여기에 정책사업 자금과 조합지원자금 중 경제사업관련 자금을 경제지주가 모두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경제지주의 자본금과 농업정책 관련 자금 및 조합지원자금의 통합운영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될 것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변경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법은 1962년 협동조합 임원의 임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8년까지 거의 30년동안 임명제로 운영되어 왔다. 조합원이 대표를 뽑지 못하는 임명제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성격을 저해한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중앙회장 및 조합장에 대한 직선제 요구는 농협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이었다.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는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켰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직선제도 함께 법제화되어 조합장 직선제 선거로 중앙회장이 선출되었다. 이후 2009년 6월 농협법 개정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되었다. 이후 농협조합장 및 농민단체 등에서는 간선제 개정을 반대하며 “조합장 직선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 대표의 선출방식은 1)조합원의 수와 참여의 수준, 2)의사결정의 체계의 형식적, 실질적 수준, 3)협동조합 사업의 업종특성과 규모를 감안할 때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대표의 기대 역량에 대한 종합적 판단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선출방식은 이들 3가지 판단 기준이 서로 상충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농협중앙회는 이런 요인이 서로 부딪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런 충돌이 중앙회장의 선출방식과 축산경제특례의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완전이관 되는 상황에서 중앙회의 업무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또한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선거에 의한 선출은 그 권한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호선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선진국 전국단위 협동조합연합회의 사례도 호선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반면에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은 1)중앙회장은 실질적으로 농협의 예산권 및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어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2)지주 및 자회사에 대한 거의 100%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회의 대표로서 간부직원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민단체는 여기에 더해 3)농민조합원의

대표자로서 강력한 농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초 경제지주회사로 경제사업의 완전이관이 이뤄지고, 6조원 자본금이 경제지주로 이관되며, 경제사업 관련 지원예산 편성권과 정책사업의 집행권한이 경제지주로 이관될 경우(중앙회장의 업무와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서 제외될 경우) 1)의 직선제 논리에서 제시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중앙회장의 영향력은 법률적으로는 배제된다는 점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두 번째 주장은 경제지주회사의 협동조합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만약 호선제가 도입되더라도 시도별 조합장 이사에 대한 지원시스템에 부족하고, 시도별 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회장의 권한이 약화될 경우 조합원을 대표하는 견제역량은 줄어들어 대리인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설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회장 호선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이나 시도조합장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의 문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협 시스템 전체의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더 심도깊은 논의로 발전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연합회, 도연합회 등의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2017년 2월말까지 실행해야 하는 경제사업 완전이관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2016년 농협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올 12월까지 법개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경제지주의 연합회 전환 등의 문제는 많은 이슈가 중첩되어 있어 5~6개월만에 결론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농협법 개정 시 농협체계 정비 등을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할 2020년 농협법 개정 위원회를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 농협을 포괄하여 운영하고, 그 논의의 결과를 2020년 농협법 개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삽입하는 것을 권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연합회 전환 및 상호금융 도연합회 설립, 인적분할 방법 등에 대한 심도깊은 농업계 전체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중앙회장 직선제를 통해 농민조합원 대표성을 높여 강력한 농정활동을 추구하자는 세 번째 직선제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회원의 교육과 지도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활동과 성과에 의해서 회원조합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협동조합적 운영이 실행되지 않는한 중앙회장의 선출방식만으로 중앙회의 농정활동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양대 지주회사에 대한 100% 출자 구조 속에서 지주회사의 배당금 및 명칭 사용료로 중앙회가 운영되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농협중앙회는 여전히 사업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중앙회가 사업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무엇보다 중앙회 자체가 양대 지주에 대한 독점적 대주주라는 소유권이 해소되어야 하고, 양대 지주의 수익에 중앙회의 사업규모가 연동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지원자금과 조합 배당에 대한 농민조합원과 일선조합 조합장을 비

못한 임직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 문제도 결국은 양대 지주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구조 변경을 전제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대안 제안

1.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 주제는 사실상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없지만,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경로의존성에 의해 과잉 이슈화 된 측면이 있다
 2. 따라서 농협법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심화 토론을 위해서라도 과잉이슈화된 중앙회장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뒤에 나오는 축산특례 전문성 부문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제안한 것과 같이,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농협중앙회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쟁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정관의 승인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이며, 중앙회장 선출은 앞으로 3년 이상 기한이 남았으므로, 완전이관 후 진행사항을 검토하면서 농협법 개정 후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축산경제 특례의 조정

현재 농협법에 명시되어 있는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이하 '축산특례')는 다음 글상자에서 볼 수 있다시피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축산경제대표의 선출시 축산조합장대표자회의가 인사추천위원회 역할을 수행(조합장 간선제), 둘째, 기존 축협중앙회 승계 경제사업 재산의 별도 관리(독자적인 대차대조표상 계정의 유지), 셋째, 기존 축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인사의 형평성 보장, 넷째, 사업계획 수립 시 축산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이 그것이다.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2000년에 마련된 축산특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법의 규정과 다른 현실의 마모를 겪게 되었다.

우선 세 번째 직원 인사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보자면 농축협 통합 후 16년이 지나 구 축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편파적인 인사와 관련한 이슈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이 규정은 “중앙회의 잉여 인력을 조정”한다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농축협 통합 후 4~5년 내에 마무리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한정을 무시하고서 구 축협 출신 직원과 구 농협 출신 직원의 인사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0년 이후에는 신규 직원을 통합하여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45세 이상의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넷째 조건에 대해서는 축산경제 사업을 수립하는 데 축산의 전문성은 보장될 수 밖에 없다. 이 넷째 조건의 진정한 의미는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주도하게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에서 실제로는 선언적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축산특례의 핵심은 축산경제대표의 선출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축협조합장이

가지고 이를 배경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사업계획과 집행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농협법에서도 결국 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의 자리는 사라지는 반면, 농협경제지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축산특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쟁점이다.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 ① 제125조의5제1항과 제1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28조제7항에 따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중앙회가 승계한 재산은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며, 그 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하는 대금의 관리 또한 같다. 다만, 신용사업 관련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회의 잉여 인력을 조정하려면 종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각각 승계한 직원 간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등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사업계획의 수립 등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축산특례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조문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즉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에서 경제사업 관련 사항과 자산이 경제지주로 전면 이관되고, 농경대표 및 축경대표의 임원 지위가 사라진다. 따라서 축산특례를 존치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아닌 경제지주회사의 분할이나 임원 규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주식회사인 농협경제지주의 임원 구조의 문제까지 농협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농협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중앙회의 축산특례 조항만 삭제하고, 경제지주 관련 법조문에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축산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주요 논거는 2000년 농축협통합 시에 축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비록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판결문”에서 축산특례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헌법합치의 요건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축산특례를 법에서 제거하면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판례에서 축협중앙회는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며, 조직의 자율성은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이를 현재의 법개정 논의에 가져와 축산인과 축협 조합장이 반대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농협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협동조합의 정관자치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며, 그것을 보장하는 기준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합의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양자의 주장이 더 합리성을 가지려면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특례를 찬성하는 쪽에 대해서는 “당시 판례는 축협중앙회를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두루 갖는 특수한 법인으로 봤으며, 자율성을 인정하나 그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농협법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해 조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된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등 축산특례만을 가지고 헌법합치를 주장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는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축산특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정관자치에 맡기는 것이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법의 위상에 맞다는 관점을 가진다면, 농협법의 다른 조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농협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 및 신용 사업활성화 및 중앙회의 일선조합 통제 완화라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업 완전이관에 대한 제도적 정비이다. 따라서 축산특례의 유지가 이런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여 농민조합원에게 실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축산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더 목적달성과 실익 제공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농협경제사업이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협동조합 계열화 체계의 정비, 2)식자재 및 온라인 시장점유율이 증가되고 재벌의 참여가 강화되는 변화된 농식품 산업의 여건을 반영한 소비지 도소매 유통 사업경쟁력 확보, 3)관련한 적절한 투자의 계획 및 집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축산특례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측에서는 축산특례의 유지가 가지는 축산경제사업 활성화의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농협중앙회장을 호선제로 선출하고, 경제지주회장은 인사위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상황에서 축산경제의 사업대표만 기존의 선출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을 수 밖에 없다.¹⁾

1) 사업적 관점에서 축산특례 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당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면의 한계상 생략한다. 사업적 검토는 단순히 축산특례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의 방향을 둘러싼 전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현재 축산특례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선안으로서 축경지주의 분리, 차선안으로서 농협경제지주의 공동회장제의 운영, 협동조합적 운영을 위해 이중이사회의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견의 제시는 어떻게 사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렇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개선의 의견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축산 특례 대안 제안

4. 현재 축산특례의 내용은 △대표성과 △전문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형평인사는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산권은 축산계정을 유지하고, 각각의 성과가 자산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유지하면 되는 기술적 문제이므로 농협법에서 굳이 다룰 사항은 아니다.
 5. 기존 축산특례는 대표성 측면에서는 중앙회장, 전문성 측면에서는 농업경제대표이사 지위를 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양측면 모두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대표성은 중앙회 직원이 갖는 한계, 전문성은 조합장 선출에 따른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6. 따라서 경제지주 완전이관과 관련하여 중앙회에 대표성은 유지하고(축산부회장), 중앙회는 현재 개정안의 임원겸임 등을 활용하여 견제하는 것으로 하며, 전문성에 대해서는 사업융합의 관점에서 단일 회장 체제로 하는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직제에서 경제지주 축산본부장을 두는 것은 정관 차원에서 검토)
-

일선조합 조합원 정예화 및 임원 판매사업 의무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진행되면서 농민조합원을 중심에 두는 수평적 계열화를 기본으로 가치사슬의 수직적 계열화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적 계열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농업계의 합의가 거의 이뤄졌다고 하겠다.

협동조합적 계열화 논의를 진행시키게 되면 결국 농협 시스템 전체의 협동조합 정체성과 사업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민조합원의 조합원 정체성과 그에 기반한 상향식 의사결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협동조합 사업활성화의 기본은 조합원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4년 이후 농협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논의의 전제는 1970년대초 완성된 지역종합농협체계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의 품목농협 논의의 핵심은 유럽과 미국의 품목농협의 선진 사례를 우리나라 농협의 발전 방향으로 이해하면서, 생산자협동조합의 관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약정조합원 제도, 품목농협연합회 설립 허용, 품목농협의 도시조합 정조합원 인정 등의 그동안의 농협법 개정 방향은 이런 전제에 기반하여 점차적으로 농협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농협법 개정 및 이후 농협사업구조개편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이런 논의 흐름의 완성판이었다. 당시 계획에서 농협중앙회 사업활성화의 미션은 “판매농협 구현”임을 명확히 했다. 즉 농협은 “농산물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생산자협동조합”이며, 이 핵심 목적을 사업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주사업인 판매사업 및 판매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수 사업을 수행하는 인적조직이라는 점이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협 조합원의 자격이나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런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조합원이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0조(제명)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57조제1항제2호의 사업(경제사업-인용자)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농협을 농협의 핵심 정체성을 바라볼 때 협동조합 정체성 차원에서 이번 개정내용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합원의 정체성이 강화되면 일선조합의 사업, 임원의 역할, 중앙회를 포함한 협동조합 계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²⁾

표1. 연령대별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현황

(단위 : 명, %, 2014년말 기준)

구분		40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65세미만	65세이상	소계
총조합원		41,204	183,890	550,608	348,273	1,209,140	2,333,115
미이용 조합원	구매사업	19,166 (46.5)	68,196 (37.2)	181,067 (32.9)	102,492 (29.4)	315,007 (26.0)	685,928 (29.4)
	판매사업	33,542 (81.4)	145,931 (79.4)	422,229 (76.7)	256,310 (73.6)	867,491 (71.7)	1,725,503 (74.0)
	경제사업	14,060 (34.1)	45,161 (24.6)	117,438 (21.3)	66,318 (19.0)	206,971 (17.1)	449,948 (19.3)

자료: 국회 농협법 개정안 규제영향 분석서

다만 법개정의 취지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 이용과 미이용을 판별하는 이용 금액의 최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

2014년말 현황에 따르면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은 45만명(19.3%)이며, 판매사업 미이용 조합원은 172.5만명(74.0%)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예상과 달리 65세 이상의 미이용조합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업농 혹은 후계농업인의

2) 농협이 판매농협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종합농협체계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단지 판매농협이란 정체성으로 압축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농정대토론회의 농협 관련 발표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지역종합농협이 '농어촌 지역 협동조합복합체의 허브'로 진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종합농협의 조합원이 진정한 농업인으로 제한하는 상황에서 지역농협이 농촌주민의 협동적 활동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협에 대한 참여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의 제명이 법제화되면 이들 중 대다수는 의도적으로 경제사업을 이용하려 할텐데, 이용 최저기준의 문턱이 몇 천원 수준이면 대부분의 일선조합이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을 형식적 차원에서 유도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제 법개정 취지는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또한 향후 농협 내부적으로 취미농이나 비농업인을 정확하게 제외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의 정예화에 따라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면 몇가지 예상되는 세부 이슈가 있다. 첫째, 조합 인가기준 미달 조합 발생(특히 도시조합)에 따른 대책 마련(조합 인가기준의 완화, 도시조합의 의제조합원 제도 도입 등)과 둘째, 제명 조합원의 자본금의 이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표준정관례 정비 등의 후속작업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어 현장의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방지해야 하겠다.

조합원의 자격기준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임원의 자격규정도 강화되게 되었다. 특히 사업이용 중 판매사업 이용요건을 특정하여, 판매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일선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이 경우 조합의 사업에는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업 이용 실적에는 해당 지역 농협이 출자한 조공사업법인의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 *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판매사업이 농협의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원의 판매사업 참여를 조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기존 경제사업 이용 자격규정에서 평균 이용의 40% 이상(도단위)이라는 규정이 있어 판매사업에 대해서도 평균 이용의 4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평균이용 이상을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4. 더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경제사업 완전 이관과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

어 있고,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원 및 일선조합 임원의 자격규정을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중앙회장 선출방식과 축산특례 유지 여부라는 핵심이슈에 대해서는 조합장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심리적인 반발감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발전은 사업체이면서 동시에 인적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맞게,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농협법 개정안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적 관점을 배제하고 인적조직으로서의 관점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로 심화되지 못하게 할 이유가 크다.

마지막으로 4대 핵심이슈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일선조합 간부직원의 비전과 사업 기획 역량에 대한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비상임조합장의 권한 축소나 기존 4년 외부 감사의 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합의없이 상임감사 제도를 의무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더 폭넓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고 해야 할 과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농협법 개정이 되길 바란다.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문 3.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 관련 한농연의 요구사항

한 민 수 실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요구사항



(사)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한민수 정책조정실장

1.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 ▶ 2017년 2월말,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 작업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한 농협법 개정이 필요함
 -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이후의 농협중앙회 및 경제·금융지주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 및 운영이 이뤄져야 함
 - 농협 계통 조직 및 농업생산 전후방을 포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체제의 구축 운영이 요구됨
 - 경제지주회사와 일선 회원조합간 경합 문제 완화(해소)
- ▶ 협동조합다운 농협,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에 힘쓰는 농협으로 만들어야 함
 - 생산자협동조합(규모화·전문화된 핵심 영농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농협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지는 판매농협 구현)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가 요구됨
 - 농협 민주화,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각종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2. 정부 농협법 개정안 관련 핵심 쟁점들

▶ 농협중앙회 및 지주회사-자회사 관련 사항

-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법 및 농협중앙회장의 직무 문제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운영 관련 문제
- 축산경제특례 관련 조항(축산경제대표 선출 방식) 문제

▶ 일선 농축협(회원조합) 관련 사항

- 조합원 정예화 문제
- 임원 결격사유 관련 문제
- 의무 도입 비상임조합장의 업무 집행권 문제
- 상임감사 제도 도입 대상 조합 설정 (자산규모 기준) 문제

3

3. 농협중앙회(지주회사-자회사) 관련 사항

▶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문제

- 농업계 내에서 조합장 직선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3년 이상 남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조합장 직선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대의원 간선제, 이사회 호선제 등)을 놓고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 농협중앙회장의 직무(업무분장)

- 경제·금융지주회사로의 분리 작업(사업구조 개편) 완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한 전문경영인 책임 경영체제 구축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기존의 위임·전결 처리(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경·축경대표이사 등으로)되었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직무 및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 농협중앙회장의 직무 범위와 변경되더라도, 이사회와 총회(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대표권을 행사하고 전문경영인을 협동조합 원칙과 정체성에 맞게 관리·감독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향후에도 충분히 유지·행사할 수 있는 것임

4

3. 농협중앙회(지주회사-자회사) 관련 사항

▶ 농협경제지주의 운영 문제

- 자체 경제사업, 정책사업, 조합상호지원자금(경제사업 부문), 유
통지원자금의 운용권을 농협경제지주가 담당하게 됨
- 위와 같이 개편된다면, 농협경제지주(자회사, 대표 포함)는 향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일선의 농민조합원 및
회원조합과의 경합 문제는 물론 “대리인 문제”는 지금보다 더
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농협중앙회 내 조합장 이사가 농
협경제지주 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농협경제지주 이사 총수 ½
이내) 하겠다는 방침임
- 하지만 지역 대표성(특광역시 및 도)이 더욱 강한 농협중앙회의
조합장 이사들만으로 농협경제지주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이 이
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농협 전문가들의 진단임
-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경제사업 규모가 크고 전문화된 조
합(장), 농협경제지주(와 자회사)의 경제사업 이용 규모가 큰 조
합(장)들이 농협경제지주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 관철될 수 있게끔 해야 함
- 아울러 농협법 제125조 4항(이사회 의결사항)에 “농협경제지주
및 금융지주 대표”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해임건의권
을 삽입하여 중앙회의 관리, 감독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해야 함

5

3. 농협중앙회(지주회사-자회사) 관련 사항

▶ 축산경제특례 관련 조항(대표 선출 방식) 문제

- 2000년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을 위한 농협법 개정 당시 삽입
된 축산경제특례 조항의 핵심은, 축산경제대표에 대한 선출
특례였음
- 통합 농협중앙회 출범 이후 16년,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
를 위한 현행 농협법 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 농경-축
경 조직(구성원)의 화학적 통합을 바탕으로 한 사업 시너지
극대화 ▪ 축산경제부문이 축산물의 생산-소비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전후방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협동조합
형 패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 발
전 전망마저도 불투명한 현실은 매우 안타까움
- 축산경제의 자율성·전문성 강화라는 축산경제특례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조합원의 축산물을 더욱 잘 판매할 수 있
게끔 임원추천위원회 방식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전문 CEO로 뽑힐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함
- 축경특례 관련 조항은 경제지주 정관에 반영하되, 농협법에
축경특례의 원칙 및 실천 의지를 밝히는 게 바람직할 것임

6

4. 일선 농·축협(회원조합) 관련 사항

▶ 조합원 정예화 관련

- 농식품부는 1년간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조합원 제명 사유로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임
-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찬성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을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함
- 즉, 경제사업 이용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조합원에게는 임원·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일시 유예하되(경제사업 이용 실적 충족시 해제), 조합 내 경제, 신용, 교육지원사업 등 영농 활동에 필수적인 일상 사업의 이용에는 지장이 없게끔 해야 함
- 특히 일선 조합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조합원을 배려한 “어르신조합원 제도” 도입, 조합설립 최소 기준 미충족시(도시조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위와 같은 조치도 중요하나, 조합원에 대한 교육 활동을 내실화하는 대안도 동시 추진되어야 함. 농협중앙회나 조합 혹은 농업인단체 주관(농식품부가 인정하는 교육 과정)의 농협 이념 및 실무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의무 이수토록 하는 조합을 농협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삽입해야 함(이사, 감사, 조합장, 대의원은 교육 이수 실적 기준을 대폭 강화)

7

4. 일선 농·축협(회원조합) 관련 사항

▶ 임원 결격 사유 문제

- 정부의 입법취지에 기본적으로 찬성함. 일정 수준 이상(예 : 조합원 평균 40% 이상)의 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부여하게끔, 관련 실무 규정 개정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

▶ 의무 도입 비상임조합장의 업무 집행권 문제

- 조합장은 조합원의 대표로서,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권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책임지고 있음
- 그러므로 조합장은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간부 직원(상임이사, 전무, 상무 등)보다 경제사업 활성화는 물론 조합원의 협동조합 이론 실무 교육, 영농 지원 사업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임
- 그런데 비조합원인 상임이사(주로 간부 직원 출신)는 조합 재무제표의 건전성 유지, 사고 방지에 더욱 집중하며, 자신과 직원의 성과보수(급여)를 확실히 챙길 수 있을 정도로만 조합 내 사업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강함

8

4. 일선 농·축협(회원조합) 관련 사항

▶ 의무 도입 비상임조합장의 업무 집행권 문제(계속)

- 게다가 상임이사는 해당 농·축협이나 인근 조합 등의 전무, 상무 등 간부 직원 출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음
- 따라서 조합장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상임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실하게 감독할 수 있는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현행대로 비상임 조합장이 사업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거나 적어도 조합원의 대표로서 교육지원사업을 담당토록 하여 총괄 감독과 책임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옳음

▶ 상임감사 제도 도입 대상 조합(자산규모 기준) 설정 문제

- 신용사업(예수금, 대출 등) 자산규모가 커 지방은행(혹은 상호저축은행) 수준에 근접 혹은 상회하는 일부 농·축협의 경우, 해당 조합의 부실 발생시 관내 지역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경우에는 상임감사 도입이 필수임
- 그러나 그 이하인 대다수 조합인 경우, ▣ 상임감사의 임명·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 이사, 감사, 대의원 대상 실무 교육 강화를 통해 조합원 중심의 자율·자치의 틀 안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음

9

4. 일선 농·축협(회원조합) 관련 사항

▶ 상임감사 제도 도입 대상 조합(자산규모 기준) 설정 문제(계속)

-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조합(농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파악 결과 50개 내외)의 조합에만 상임감사 제도를 의무 도입하게끔 농협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함. 이는 협동조합의 원칙, 정체성, 운영 원리에 비춰보더라도 합당한 것임

10

5. 그 밖의 검토사항들

▶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관련

- 조합원(조합) 입장에서 농협중앙회 및 지주회사-산하 자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엄정한 감사 업무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일선 조합장 출신이 감사위원장으로 되어야 마땅함
- 단, 농협중앙회 및 지주회사-자회사의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감안하여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외부 전문가 출신 감사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 조합감사위원회 관련

- 일선 조합에 대한 농식품부의 관리·감독기능을 위임하여 조합원 보호를 도모하자는 것이 조합감사위원회의 설립 취지임
- 일선 조합들의 비리, 비위와 관련한 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 시도지역본부 등)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내부 고발자(조합원, 직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 때문에 조합감사위원회장을 외부 전문 인사가 맡게끔 하고, 조합 감사 업무에 대한 이사 조합장들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의사결사항·처리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 또한 명시해야 함(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 약자인 조합원의 권리 보호 등)

11

6. 나가며

▶ 당초 농협경제지주에 배정기로 한 6조원의 자본금을 2017년 2월말까지 전액 배정 완료해야 함

- 농협경제지주에 지금까지 출자 완료된 자본금은 2조원에 불과한 상태이며, 나머지 4조원이 2017년 2월말까지 추가 출자되어야 함
- 2011년 농협법 개정시 경제사업 부문에 농협중앙회의 자본금을 최우선 배정기로 법 부칙에 분명히 명시하였으므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함

▶ 농협의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향성 모색 및 실천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 검토해야 함

- 이번 농협법 개정시 조합원 정예화 문제가 처음 다뤄졌지만, 농업 생산이 갈수록 전업화, 규모화되는 반면 조합원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조합원 이질화 문제는 물론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아울러 농협중앙회 및 산하 지주회사-자회사와 관련하여 일선 조합-조합원과의 “대리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경제지주(자회사)와 조합(조합원)간의 경합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일선 현장에서는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12

6. 나가며

▶ 농협의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향성 모색 및 실천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 검토해야 함(계속)

- 1961년 종합농협 출범 이후, 우리 농업·농촌은 시장 개방 확대와 품목·축종별 전업화가 급진전됐으나, 한국 농협의 기본적인 조직 틀이나 운영 원리는 1970년대 읍면농협 체제로의 전환 이후 전혀 변화하지 않고 지체된 상태임
- 이번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갈등들은,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이 현실 속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 농협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물론, TPP나 RCEP 등 메가 FTA가 본격화되고 농축산물 관세율이 0%로 되는 2020년대 중후반 이후의 상황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농업·농촌 및 한국 농협의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농업계 차원에서 본격화해야 할 때임
- 오늘 토론회 이후 보다 깊이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함

13

감사합니다

14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